



주간통일정세 2009-05(2009.01.28~02.01)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09-05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 김정일, 대의원 후보로 추대(2/1,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일 ‘제333호 선거구’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후보로 추대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북한은 1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군 총정치국장, 김격식 총참모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등 군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제333호 선거구 선거자대회를 갖고 김 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로 결정
-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보고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는 우리 사회주의 조국에 기어이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기 위한 투쟁에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역사적 사변”이라며 “최고사령관 동지 두리(주위)에 굳게 뭉친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온 세상에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제333호 선거구 선거자대회가 군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군 시설인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것으로 미뤄볼 때 이 선거구는 군 관련 선거구로 관측
- 김 위원장이 제333호 선거구 선거자대회에서 대의원 후보로 결정됨에 따라 그는 앞으로 10여일 후 이 선거구에서 대의원 후보로 공식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정일 위원장이 제333호 선거구 대의원 후보로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북한 전역의 선거구에서도 김 위원을 후보로 추대하는 행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 ● 김정일, 軍배구경기·공연 관람(1/2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설을 맞아 북한군 배구팀간 경기와 북한군 협주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
- 김 위원장의 경기관람엔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장성택 당 행정부장,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리제강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김기룡 중앙통신사 사장, 차승수 조선중앙방송위원장, 현철해, 김명국, 리명수 북한군 대장이 수행, 공연 관람에는 이들 외에 북한군 해군사령관 정명도 상장, 공군사령관 리병철 상장도 수행
- 통신은 배구경기는 ‘4·25’팀과 종합팀간 열렸으며, 공연은 해군사령부협주단과 공군사령부협주단이 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장소와 일시 등은 전하지 않음.



● **김정일, 정치적 입지 회복한 듯(1/29, 로이터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의 건강위기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제자리를 잡고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 같다고 미국 관리가 밝힌 것으로 로이터통신이 29일 보도
- 로이터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안보담당 관리는 “김 위원장이 북한 당국내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등 지금은 권력의 핵심에 앉아 있는 것 같다”면서 “그는 몇 달 전 건강문제로 고생을 겪었지만 최소한 지금으로선 그런 문제들이 김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에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다”고 답변

나. 정치 관련

● **北, 南경고외면, 군사충돌 이어질 수도(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화근은 제때에 제거해 버려야 한다’ 제목의 논평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1.30)을 거론하면서 북측 경고에 대한 남한 정부의 외면이 현재 한반도의 정전상태를 감안할 때 군사적 충돌과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
- 노동신문은 조평통의 성명은 “남북관계가 더이상 수습할 방법도, 바로잡을 희망도 없게 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한 당연한 조치”라며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가 험악한 지경에 처하게 된 책임이 있으며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한다”고 주장
- 신문은 “우리는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남북관계 전면 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데 대해 한 두번만 경고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남측 정부는 “상투적 협박’이니 ‘버티기 전략’이니 뭐니 하며 우리의 경고를 외면하고 오히려 반공화국 대결과 북침전쟁 도발소동을 벌여놓는 것으로 대답해 나갔다”고 비난
- 이 신문은 이어 “정전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결은 곧 긴장격화이고 그것은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군사적 충돌,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의 준엄한 경고를 외면하고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것이 중국적 파멸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
- 또 노동신문에는 홍서헌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을 비롯해 김만수 전력공업성 부상, 조선사회민주당 김지선 부위원장, 태천군 은홍협동농장 허정옥 관리위원장 등이 조평통 성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대남 “대결 의지”를 담은 글을 기고

● **北, 남북관계 최악대비 끝낸듯(2/1, 신화통신)**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월 30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성명을 내고 남북 간 정치·군사 합의사항의 무효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위기를 분석하는 장문의 기사를



### 1일 게재

- 통신은 그러면서 조평통의 발표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한국 정부가 취한 대북정책이 이른바 ‘부끄러운 실패’를 했다는 상황을 이끌어내려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는 북한이 남북 관계에서의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를 끝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 그러나 조평통의 성명이 수위가 높긴 하지만 남북 관계의 개선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닐 것으로 관측
- 조평통의 성명에 북한이 중시하는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고성 메시지와 맥을 같이하며 남북 관계에 대한 개선의 여지도 담겨 있다고 분석

### ● 비핵화, 동북아 냉전구조 해체 필수(1/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
- 노동신문은 “동북아시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것은 이 지역 나라들의 공동의 이해관계에 부합될 뿐 아니라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 “미국은 현실을 냉철하게 대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냉전구조를 하루빨리 해체하여야 한다”고 강조
- 이 신문은 또 “미국의 미사일방위(MD) 체계 수립 책동을 저지·파탄시켜야 한다”며 “미국은 동북아시아와 유럽지역에 강력한 미사일망을 형성하고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나라들에 미사일 선제공격을 들이대는 방법으로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타산하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이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 책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주변나라에 대한 선제공격 폭언들이 거침없이 튀어나오고 있다”고 비난

### ● 北, 미국 동경 주민 확산 경계(1/27, 민주조선; 1/30, 우리민족끼리)

- 북한이 최근 대미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와중에도 민주조선은 “미국에 대한 환상은 비참한 운명을 초래한다”며 철저한 ‘사상 무장’을 강조
- 민주조선 27일 ‘반제투쟁에서 적에 대한 환상은 금물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평화’와 ‘인권존중’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지만 “반제투쟁에서 승리하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자면 적에 대한 자그마한 기대와 환상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 신문은 베트남전 사례를 거론, “몇십년 전 동남아시아의 어느 한 나



라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싸운 고용병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지금 버림받아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이라크에서도 마찬가지로” 라고 주장

- 신문은 “적들은 각이한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북한)를 비롯한 반제 자주적인 나라 인민들에게 색정, 부화방탕, 인간증오의 내용이 담긴 도서, 녹화테이프 등 각종 불순 선전물들을 전파”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민심을 소란케” 하며 “돈과 뇌물로 사람들을 매수, 유혹하는 방법 등을 통해 불평분자, 동요분자, 타락분자, 변절자들이 생겨나게 해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책동도 벌이고 있다”고 경계심을 드러냄.

○ **北, 남북기본합의서 NLL조항 폐기(1/30,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0일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일방 선언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발표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성명에서 “오늘 조선반도 정세는 남조선 보수 당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의해 갈수록 긴장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
- 조평통은 “북남 당국 사이에 지난 시기 채택된 합의들에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존중 문제, 비방중상 중지 문제, 무력충돌 방지 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할 데 대한 문제들이 반영돼 있다”고 일방적인 무효화 선언 대상을 예시
- 조평통은 “현실은 북남 합의사항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한다”고 언급
- 조평통 성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방문과정에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발언과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급변사태론, 선제공격론 등을 거론, “북남 합의사항들을 무참히 파괴, 유린했다”며 “이런 형편에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북남 합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됐으므로 우리는 그 합의들이 전면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정식 선포한다”고 주장, 또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가운데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내용을 지적하면서 “북남합의 파괴책동으로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 관련 조항들이 휴지장으로 되어버린 조건에서 우리는 그 조항들을 완전히 그리고 중국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한다”고 언급
- 조평통은 또 ‘비핵·개방·3000’ 입안자인 현인택 고려대 교수를 통일부장관에 내정한 것은 “우리와 끝까지 엇서나가겠다는 것을 세계 면전에 선언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이제 북남관계는 더 이상 수습할 방법도, 바로잡을 희망도 없게 되었다”며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은 극단에 이르러 불과 불, 철과 철이 맞부딪치게 될 전쟁 접경



으로까지 왔다”고 주장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까지 부정한 마당에 이제 그 무슨 대화에 대해 논할 여지가 있고 화해와 협력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임.

#### 다. 경제 관련

##### ● 北, 적개심 활용한 경제 선동(1/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1일 각계 반응식으로 조평통 성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선전하면서 대남 ‘적개심’을 경제재건 동원에 활용, 이 신문은 노동계, 농업부문, 기계부문 대표들과 함께 군장성을 곁들여 전날 조평통 성명에 대한 반응을 다짐의 글 형태로 전하면서 “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강화하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긴장한 투쟁을 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도 인용
- “분노의 피”가 끓어오른다는 장학수 농업성 국장은 “농사 채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남한 정부를 “징벌하겠다”거나 “멸적의 충창을 박는 심정으로 기름생산과 실어내기에서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고 있다”고 경제선동을 진행

##### ● 금융위기에 北채권가 사상 최저(1/31,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북한 채권 가격이 하락을 거듭해 현재 거래가는 액면가의 10분의 1도 안되는 1달러당 8센트로 1994년 발행 이래 최저가를 기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보도
- 북한에 돈을 빌려준 서방은행들이 그 일부라도 찾으려고 발행한 북한 채권의 현재 거래가는 3개월 전 12센트에 비해 30% 넘게 떨어진 것으로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방송은 보도, 북한 채권은 1년 전 가격은 달러당 32센트였음.
- 방송은 북한이 서방은행에 갚아야 할 빚을 총 16억 달러로 추정하고 현재 북한 채권은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 때 10센트대로 떨어진 이후 최저가라고 설명, 북한 채권의 거래를 대행하는 영국 금융 중개회사인 이그조틱스사의 스투어트 컬버하우스 수석경제분석가는 “전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확보를 위해 투자자마다 안전한 현금을 선호하고 채권과 같은 상품에 투자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북한 채권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북한 채권 가격이 북한의 변화나 행위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금융위기에 따른 전 세계적 추세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상승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

##### ● 北, 세계 식량위기 장기화 강조(1/30, 노동신문)

- 북한 당국이 세계적인 식량위기를 내세워 심각한 북한 식량난의 책임을 외부요인에 전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신문은 30일 식량위기



에 대처한 국제적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장기화될 것이라며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도상국의 대응책을 관심있게 보도

- 신문은 식량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세계 각국은 식량문제 해결에서 “그 누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체의 힘에 의거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식량절약과 자립 등 북한 당국이 내세우는 정책에 맞춰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위기 타개책을 소개

#### ● 北, 경제선동에 60~80대 노인들도 나서(1/29, 조선신보)

-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경제재건을 위해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킬 것을 주민들에게 독려한 가운데 60대-80대 노인들로 구성된 선동대도 기업소 등 현장에서 경제선동에 나섰다 조선신보가 29일 소개
- 신문은 이들이 고 김일성 주석 사망 10주년인 2004년 조직된 ‘평양시혁명열사유자녀실화기동대’ 소속으로 “대일, 대미항쟁에서 생을 빛내인 애국열사들의 자녀들”이며 평균 나이 70세라고 설명, 이들은 예술분야 전문기량은 없지만 “선대들의 정신과 투지가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해 꾸밈없이 전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
- ‘실화’기동대라는 단체 이름도 “역사의 중요 국면들에서 실지 체험한 내용들을 실감있게” 전한다는 취지에서 붙여진 것으로 추정됨. 나이로 볼 때 이들은 1950,60년대 천리마운동을 직접 경험한 세대임.

#### ● 北, 기존 공장 개건 우선해야(2008년 4호,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 김일성종합대학 학보가 많은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경제를 빨리 현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장의 개조·개건(개선)을 우선할 것을 주장, 2008년 4호에서는 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달성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하는 것”, “지금 있는 공장, 기업소들의 기술 개건(개선)과 현대적인 공장 건설을 옹계 배합하는 것”, “절실하고 실리가 큰 대상부터 해나가는 것” 등이라고 언급
- 학보는 “새 공장 건설은 많은 자금이 들고 오랜 기간이 걸리는 반면 기존 공장 개건은 큰 투자를 하지 않고도 현대화를 빨리 실현할 수 있다”면서 “지금 있는 공장, 기업소들의 설비와 생산공정을 개조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
- 학보는 “최신 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 정보화는 많은 현대적 설비와 자재, 자금을 요구한다”며 “이런 조건에서 공장, 기업소의 현대화를 처음부터 많은 대상들에 벌려놓고 한꺼번에 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집중’ 전략도 제시



● **北, 식량난 해결책으로 재배어업 강조(1/17, 노동신문)**

- 북한이 식량난 해결에 매달리고 있는 가운데 북한 국가과학원 수산 과학분원의 신상일 원장은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수산부문의 식량 해결 기여책으로 '재배어업'을 강조, 그는 "수산 자원을 잡기만 하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인공적으로 길러서 잡는 어업이 중요합니다." 라고 주장

● **美 대북식량 7차분 도착 지연(1/29, 미국의소리방송)**

-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식량 50만t중 7번째 선적분의 북한 도착이 약 천후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9일 보도
- 익명을 요구한 미국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는 "당초 19일까지 남포항에 '옥수수과 콩 혼합물'과 식용유 4천940t이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 식량을 실은 배가 중국 랴오닝(遼寧)성의 다롄(大連) 항구에서 대기 중"이라고 말했으며, 미 국무부 관계자는 도착 예정일을 1월 말이라고 밝혔다
- 이번 7차분 식량은 머시코, 월드비전, 사마리탄스 퍼스,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등 5개 미국 NGO가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25개 군에서 분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유니세프, 대북지원 1300만 달러 목표(1/28, 유니세프 '2009년 인도주의 활동 보고서')**

-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는 올해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사회로부터 1천300만 달러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힘. 28일 유니세프가 발표한 '2009 인도주의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문별 소요자금은 보건·영양 분야 750만 달러, 수질과 공중위생 분야 450만 달러, 교육 분야 100만 달러 등임.
- 유니세프는 "2007년 홍수 피해의 여파와 전통적으로 상당한 양의 식량 부족을 겪어왔던 (한국과 중국 등으로부터의) 식량 수입이 급감하면서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의 영양부족 상태가 심각한 우려 사안이 되고 있다"고 강조
- 유니세프는 북한에서 계속되는 가난과 미흡한 보건위생 체계, 불량한 수질 및 위생 시설, 아동·임산부에 대한 부적절한 보호 조치, 취약한 식량 상황 등으로 인해 아동사망률이 1천명당 55명, 5세미만 아동과 임산부가운데 각각 37%와 32%가 영양부족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

라. 사회·문화 관련

● **유엔, 北 세쌍둥이 부모와 분리양육 우려(2/1, 연합)**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북한 어린이들의 권리에 관한 대북 권고문에서 먹는 문제 등 경제사회적 권리에서 더 나아가





자유로이 책이나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등 포괄적인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해문제도 제기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특히 제34항에서 세쌍둥이가 국가에 의해 홍보 목적으로 자동적으로 부모로부터 떼어내져 양육되는 것을 포함해 북한의 탁아소 제도에 우려를 나타내고, 집체공연인 ‘아리랑’에 아이들을 동원, 공부할 시간을 빼앗는 문제를 시정할 것과 교과 과정에 평화교육을 포함시켜 평화와 관용의 문화를 학교에서 배양할 것을 권고
- 다음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북한 아동권리에 대한 3번째 권고문의 주요 내용임. 1)북한 시민단체가 관변단체와 구별이 안되는 점을 바로잡기 위해 자발적 시민사회를 조성할 것, 2)부모의 출신성분에 따른 아동 차별을 없앨 것, 3)상당수 아동이 실제론 고아가 아닌데도 고아원같은 아동보호기관에 수용돼 있는 현실을 시정할 것, 4)산간벽지 등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의약품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게 할 것, 5)유엔 기관들이 지원하는 식량 등 인도적 물자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할 것, 6)16세 전후 소년병 징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장자순으로 징병할 것, 7)아편농장 노동에 아동이 동원되고 약물 남용이 증가하는 데 대한 우려 표명

#### ● 北평양시, 보통강 대대적 준설(1/29, 조선신보)

- 북한 평양 도심을 흐르는 보통강의 강바닥에 쌓인 감탕(진흙)을 제거하기 위해 강바닥을 파내는 작업이 “대중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9일 보도, 보통강 준설 작업은 “지난 시기 청년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벌이는 사회정치 활동의 일환”이었지만 지난 21일 시작된 작업에는 평양의 11개 구역 기관, 기업소들과 성, 중앙기관이 망라됐다고 신문은 설명해 전 시적으로 노력동원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
- 조선신보가 제공한 사진에는 큰 돌들을 수북이 쌓인 보통강 둔치에서 두툼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돌과 진흙 등을 이어 나르는 모습이 담겨있어 준설 작업이 중장비보다 인력 위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줌.
- 보통강변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8월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진 후 치료를 받은 곳으로 알려진 고위층 전용 봉화진료소를 비롯해 유명음식점인 청류관과 대형 대중목욕탕인 창광원 등이 인접했고, 중앙당 부부장들의 사택들도 즐비하지만 오염이 심해 평소에도 악취가 심한 곳으로 알려짐.

#### ● 北교육지, ‘아이 눈높이 토론’ 권장(2008년 5호, 인민교육)

- 북한의 격월간 교육잡지 ‘인민교육’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을 활성화할 것을 권장, ‘인민교육’은 2008년 5호에서 독일의 가정교육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독일 부모들은 아



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어른들과 논쟁하도록 고무 격려하고 있다며 이러한 입장은 아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 이와 함께 아이의 학습성적이 좋지 못하거나 불량행동을 했을 때도 독일 부모들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놓고 아이들과 진지하게 토론하며 아이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다는 점을 지적

## 2. 대외정세

### 가. 6자 회담관련

#### ● 러시아도 대북 중유지원 완료(1/30, 연합)

- 미국에 이어 러시아도 북핵 6자회담 차원에서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에 맞춰 제공해야 하는 중유지원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짐. 외교 소식통은 30일 “러시아가 담당하기로 한 중유 20만t의 대북지원이 최근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보도
-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검증의정서 채택에 실패하자 검증문제와 대북지원을 포괄적으로 연계, 남은 중유 5.5만t 상당의 지원을 사실상 중단했지만 러시아와 중국 등은 ‘대북지원은 불능화와 연계된 것’이라며 의정서 채택 실패와 관계없이 지원을 계속해 왔음. 중국은 중유 6만t 상당의 지원을 남겨놓고 있어 3월 초까지는 지원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앞서 작년 하반기에 가장 먼저 중유 20만t 지원을 완료

#### ● 北외무상, 6자회담 러 수석대표 면담(1/29, 조선중앙통신)

- 박의춘 외무상이 2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북핵 6회담 러시아측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을 면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통신은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음.

### 나. 북·미 관계

#### ● 美거물급 민간 방북단, 베이징 도착(2/1, 연합)

- 이번주 초 방북할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거물급 북한 전문가들이 평양 방문에 앞서 1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 전직 미국 정부 관리와 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7명의 방문단은 베이징에서 이틀간 머문 뒤 북한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짐.
- 방북단의 일원인 모튼 아브라모위츠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방북 일정과 관련, 오는 3일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방북단 관계자들은 토요일인 7일 평양을 떠날 예정이라고 언급



- 방문단에는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대사, 조너선 폴락 미 해군대학 교수 등이 포함,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간 첫 민간 교류가 될 이번 방북에서 방북단은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 북측 고위인사들도 접촉할 것으로 전망돼 단순한 민간 교류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美, 北 대남공세 도움 안돼(1/30, 미 국무부)**

- 미 국무부는 30일 북한이 정치, 군사적 남북합의를 일방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북한의 대남공세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힘.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남북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이러한 수사적 공세는 분명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우리의 지속적인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가로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언급

● **조선신보, 오바마의 현명한 선택 바랄 뿐(1/30,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30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 소식을 전하면서 대북정책에서 “그의 현명한 선택을 바랄 뿐”이라고 기대를 표시  
- 조선신보는 “조선반도(한반도) 정책에서 오바마씨는 부시 정권시대의 ‘잃어버린 8년’을 도로 찾으려 하듯 협상과 교섭, 평화적인 해법을 추구하고 있다”고 희망적인 분석을 하고 “클린턴 정권시대의 교훈도 살리고 냉정하게 대처한다면 조선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결코 어렵지 않다”고 강조

● **오바마정부, 北인권상황 우려(1/29, 미 국무부)**

- 새로 출범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29일 공식 밝힘. 국무부는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책도 전체 대북정책 리뷰의 일환으로 재검토되고 있다고 확인, 대북정책 재검토가 마무리돼야 대북인권정책도 가시화될 것임을 내비침.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대변인 직무대행은 브리핑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 인권상황은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상당한 우려사항(something of concern)”이라고 답변하고 “분명한 것은 북한인권문제는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진전시킬까라는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의 일부”이라고 언급, 북한 인권 대응책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오바마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주요 관심사로 다룰 것임을 시사

● **美, 北동창리 미사일기지 완성단계(1/29, 연합)**

-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건설중인 미사일기지가 완성단계로, 올 봄에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국제위기감시기구(ICG) 서울사무소의 대니얼 핑크스톤 수석연구원



은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위성사진과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이 북서쪽에 짓고 있는 최신 미사일기지는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힘.

- 북한은 2006년 7월5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대포동2호 미사일(사정 4천300~6천km)을 처음으로 발사했지만 40초간 정상비행하다 공중에서 부러져 실패한 바 있음. 한국과 미국의 정보당국은 북한이 8~9년 전부터 동창리에 무수단리 기지보다 규모가 큰 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건설해 온 것으로 보고 있음.
- 핑크스톤 연구원은 북한이 동창리에 미사일 기지를 마련한 것은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며 “동창리에서 발사된 미사일도 일본위를 지나갈 수는 있지만 북한은 일본 영공보다 높이 지나갔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
- 그는 또 북한이 미국 오바마 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핵실험 준비차원의 고폭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북한은 2008년 하반기까지도 플루토늄은 사용하지 않는 고폭실험을 계속했다”면서 “평양은 정치적 효과가 최고조에 이를 시점을 택해 고폭실험을 재개할 것”이라고 주장

#### ● 미국방, 北이 핵완전포기할 지 지켜보야(1/27,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발언문)

-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27일 북핵문제와 관련,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거듭 확인하고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포기하려고 하는 지는 좀 더 지켜보야 할 것이라고 언급
- 게이츠 장관은 또 북핵 6자회담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에 대처하는 데 있어 전향적 모멘텀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까지의 결과가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지적
- 게이츠 장관은 이날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사전 배포한 발언문에서 “우리(미국)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미국에 적대적인) ‘불량국가’와 테러집단, 핵·화학·생물무기의 결합”이라면서 이와 관련된 북한의 위협을 언급
- 그는 핵을 제외한 북한의 재래식 군사능력은 장비가 점차 노후화되고 각종 자원과 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쇠퇴했지만 북한은 사거리를 늘린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도 개입한 기록을 갖고 있다고 지적
- 게이츠 장관은 6자회담과 관련, “6자회담이 특히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에 대처하는 데 일정 정도 전향적 모멘텀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의 결과에 완전히 만족한다고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6자회담의 성과에 불만을 드러냄. 그는 또 “6자회담은 북한이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하거나 우라늄을 농축하는 능력을 줄이거나 제거하고, 확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이지만, 북한이 핵야욕을



완전히 포기할 의향이 있는 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고 밝힘.

#### ● 힐러리, 북핵 6자회담 필수적(1/27, 미 국무부)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7일 북핵 6자회담은 필수적이라며 북핵 문제해결 과정에서 6자회담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북미 양자 회담을 활용할 가능성도 열어 놓음. 클린턴 국무장관은 국무부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의 6자회담은 필수적”이라며 “6자회담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가 들어 있는 다른 문제를 다루는데도 참가국들에 유용했다”고 언급
-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어 “6자회담 내에 (북미)양자회담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우리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해 북핵 문제 타결을 위해 북미 양자회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음을 내비침.
- 이와 관련,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장관이 언급한 ‘필수적’이라는 용어가 기본적으로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이 지키겠다고 말한 협정을 준수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어떤 변화도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

#### 다. 기타외교 관계

##### ● 북한, 태외무장관 평양방문 초청(1/29, 연합)

- 카시 피로미야 태국 외무장관은 29일 북한 정부로부터 평양 방문을 초대받았다고 밝힘. 카시 장관은 기자들에게 오영선(59) 태국주재 북한 대사가 예방해 구두로 평양 방문을 제안했다고 소개
- 그는 이 자리에서 오 대사에게 1970년대 북한으로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태국 여성 아노차 판조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힘. 아노차는 1978년 5월21일 마카오에서 친구들과 일을 하던 중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은 지금까지 아노차의 납치를 부인해왔음.
- 카시 장관은 또 탈북자들의 태국 망명 문제와 관련, 탈북의 주요 통로인 중국과 사태해결 방안을 논의하라고 제안했다고 설명하면서 “더 이상 탈북자들의 망명지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언급

##### ● 노동당대표단 영국 방문(1/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박경선 당 중앙위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노동당 대표단이 영국을 방문하기 위해 27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오바마-아소 북핵협력 합의(1/30)

-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28일(미 동부시간) 저녁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와 전화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에서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29일 밝혔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과 아소 총리가 전화통화를 통해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대화를 나눴다면서 북한의 핵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6자회담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다짐했다고 말했다.
- 깁스 대변인은 두 정상은 국제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오바마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미일 동맹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시했고 아소 총리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 ● 北외무상, 6자회담 러' 수석대표 면담(1/29)

- 북한 박의춘 외무상이 2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북핵 6회담 러시아측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을 면담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중앙통신은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 러시아는 북핵 6자회담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회의의 의장국으로서 내달 중순 제3차 실무그룹회의를 갖는 방안을 6자회담 참가국들에 타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보로다브킨 차관의 방북 목적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임.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은 박 외무상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선물을 전달했음.

##### ● “北핵확산 막으려면 美 에너지 지원해야”(1/28)

- 북한의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 제공 등 어떤 식으로든 에너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 찰스 카트먼 전 KEDO 사무총장과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 로버트 칼린 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사무총장 정책보좌관 등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앞으로 대북 관계에서 KEDO 사업의 교훈을 새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이 전문가들은 이날 뉴욕 컬럼비아대 한국학연구센터에서 ‘KEDO의 교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려다 중단된 KEDO의 역사와 그 의미를 평가하며 버락 오바마 차기 정부에 KEDO의 교훈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음.
- 카트먼 전 사무총장은 ‘북한이 경수로를 다시 요구할 경우 미국의 새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나’는 질문에 미국이 KEDO 사업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북한에 전혀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방식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음.
- 그는 향후 핵심 문제 중 하나는 이미 핵보유를 선언하고 핵물질 생산능력도 갖춘 북한 같은 나라가 경수로사업으로 원자료를 갖는다는 것에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느냐지만 장기적으로 특정 국가가 원자료를 갖는 것을 막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면 이같이 말했음.
- 그는 “북핵 비확산 합의를 위해 협상을 하는 국가가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에 족적을 남기고자 한다면 미국이 1994년에 경수로 제공 합의를 할 당시 처럼 한 손은 내밀면서 지원은 전혀 하지 않으려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워트 전 담당관도 KEDO를 만들 당시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할 미국의 입지가 자금을 지원하기 꺼리는 바람에 훼손됐다면서 향후 KEDO 같은 기구가 다시 만들어진다면 참여국의 정치적 리더십, 특히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KEDO의 실패를 거론하면서 “이제 북한은 핵실험을 했고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북한에 원자료를 건설해 줄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음.
- 그는 이어 “(다른 나라들은) 원자로 완공 전에 북한에 핵무기를 포기 하라고 하겠지만 북한으로선 원자로 건설이 끝나는 것을 먼저 보기를 원하지 자신들이 앞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대규모의 전통적 에너지 지원 등 대안을 북한에 확신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음.

#### ● 미국무·국방, 6자회담 이견 표출(1/28)

- 새로 출범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대북 및 북핵 정책에 대한 전 반적인 재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의 대외정책을 수행하는 두 기동인 국무·국방장관이 북핵 6자회담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아 주목됨.
-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27일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에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지금까지 6자회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견해를 드러냈음. 특히 오바마 정부는 ‘터프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대북정책의 큰 틀로 공식 제시했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중인 오바마 정부의 대북 및 북핵정책 재검토가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북한과의 6자회담은 필수적”이라면서 “6자회담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뿐만아니라 북한과 관련된 다른 문제를 다루는 데도 회담 참가국들에 유용했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북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6자회담의 틀을 적극 활용하는 등 6자회담을 더욱 활성화 시킬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도 해석됨.
- 클린턴 장관은 “6자회담내에 (북미) 양자회담이 있었다”면서 “우리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바마 정부에서도 6자회담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그 양상도 전임 부시 행정부가 제시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 하지만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날 지금까지 북핵 6자회담 성과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6자회담 추진양상이 전임 부시 행정부 때와 크게 달라지거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 이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게이츠 장관은 서면으로 제출한 발언에서 “북핵 6자회담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에 대처하는 데 일정 정도 전향적 모멘텀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의 결과에 완전히 만족한다고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그는 “6자회담은 북한이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하거나 우라늄을 농축하는 능력을 줄이거나 제거하고, 확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제공해야 한다”고 6자회담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다시 말해 6자회담에서 우라늄 농축문제와 핵확산 문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임.
- 뿐만 아니라 게이츠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이지만, 북한이 핵야욕을 완전히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 북한 당국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6자회담이 성공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음을 지적했다.
- 미국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장관과, 안보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장관이 북핵 6자회담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드러냄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및 북핵정책을 재검토하면서 어떤 절충안이나 보완책, 또는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림.

### ● 미국방 “北, 핵완전포기할 지 지켜봐야”(1/28)

-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27일 북핵문제와 관련,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거듭 확인하고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포기하려고 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또 북핵 6자회담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에 대처하는 데 있어 전향적 모멘텀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까지의 결과가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 게이츠 장관은 이날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사전 배포한 발언문에서 “우리(미국)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미국에 적대적인) ‘불량국가’와 테러집단, 핵·화학·생물무기의 결합”이라면서 이와 관련된 북한의 위협을 언급했음. 그는 핵을 제외한 북한의 재래식 군사능력은 장비가 점차 노후화되고 각종 자원과 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쇠퇴했지만 북한은 사거리를 늘린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도 개입한 기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음.
- 게이츠 장관은 6자회담과 관련, “6자회담이 특히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에 대처하는 데 일정 정도 전향적 모멘텀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의 결과에 완전히 만족한다고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6자회담의 성과에 불만을 드러냈음. 그는 또 “6자회담은 북한이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하거나 우라늄을 농축하는 능력을 줄이거나 제거하고, 확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이지만, 북한이 핵 야욕을 완전히 포기할 의향이 있는 지는 여전히 지켜보아야 한다”고 밝혔음. 게이츠 장관은 이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해 현재 또다른 주요한 지상군사작전을 전개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7년 이상 끌어온 두 전쟁의 후유증을 지적했음. 그러면서도 그는 “미국은 걸프만에서든, 한반도에서든, 대만해협에서든 공격행위를 감행하는 적들은 무찌를 충분한 해군과 공군의 전투능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칼 레빈 군사위원장은 “북한이 지역안정에 여전히 위협이 되고, 중국의 전략적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아·태 지역에 우리(미국)는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역설했음.

#### ● “북핵 6자회담 필수적” <클린턴>(1/28)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7일 북핵 6자회담은 필수적이라며 북핵 문제해결 과정에서 6자회담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북한과의 6자회담은 필수적”이라며 “6자회담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가 들어 있는 다른 문제를 다루는데도 참가국들에 유용했다”고 밝혔음. 그는 이날 상원 인준청문회 발언이 북한과 핵무기 폐기협상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음.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문제와 관련, 6자회담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북미 양자 대화를 모색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됐음.
- 이와 관련,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장관이 언급한 ‘필수적’이라는 용어가 기본적으로 많은 것은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그는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이 지키겠다고 말한 협정을 준수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원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어떤 변화도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정책에 대한 재검토 시한을 지정해 말할 수는 없다”면서 우드 부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핵검증서와 모든 세부 이행조치를 문서로 서명하기를 원했지만, 북한이 그렇게하기를 원치 않았다”며 “의무 이행에 대한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고 말했다.

#### ● 6자 동북아안보회의 내달 19~20일 열릴듯(1/27)

- 북핵 6자회담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회의가 다음 달 19~2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릴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7일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의장국인 러시아가 지난번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2월 중 모스크바에서 제3차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19~20일 여간에 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글레브 이바센초프 주한 러시아대사는 지난 15일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 숙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 같은 일정으로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하려 한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다만 “아직 러시아로부터 공식적인 회의 일정이나 프로그램을 받은 게 없다”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일정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2.13합의’의 산물인 5개 실무그룹 중 하나로, 2007년 3월 베이징 회의, 같은 해 8월 모스크바 회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회의.
- 허 철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을 비롯한 6개국 대표들은 3차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러시아가 회람한 ‘동북아 평화·안보에 관한 기본원칙’ 제2차 초안을 두고 각국의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추가적인 검토를 하게 됨.
- 외교소식통은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이 채택하기 위해 노력 중인 ‘동북아 평화·안보에 관한 기본원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일지라도 동북아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라며 “세부적 내용을 두고 각국이 협의할 사안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 ● 6자회담 러시아 수석대표 방북(1/27)

- 북핵 6자회담의 러시아측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이 27일 방북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중앙통신은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부상(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외무성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으나 구체적인 방북 목적과 일정 등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핵 6자회담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회의의 의장국으로서 내달 중순 제3차 실무그룹회의를 갖는 방안을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타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보로다브킨 차관의 방북 목적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임.
- 특히 이번에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회의가 열리면 지난해 12월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러시아가 회람시킨 ‘동북아 평화·안보에



관한 기본원칙’ 제2차 초안을 놓고 각국의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추가적인 검토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 러시아는 회의에 앞서 북측과 이에 관한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나. 미·북 관계

### ● 美거물급 민간 방북단, 베이징 도착(2/1)

- 이번주 초 방북할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거물급 북한 전문가들이 평양 방문에 앞서 1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음. 전직 미국 정부 관리와 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7명의 방문단은 베이징에서 이틀간 머문 뒤 북한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음.
- 방북단의 일원인 모튼 아브라모위츠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방북 일정과 관련, 오는 3일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북단 관계자들은 토요일인 7일 평양을 떠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문단에는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대사, 조너선 폴락 미 해군대학 교수 등이 포함돼 있음.
-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간 첫 민간 교류가 될 이번 방북에서 방북단은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 북측 고위인사들도 접촉할 것으로 전망돼 단순한 민간 교류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 “빌 클린턴, 키신저 대북밀사 검토해야”(2/1)

-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일본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고위급 밀사(emissary)를 북한에 파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 한반도 전문가인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협력안보프로젝트 국장은 지난 28일 ‘원자 과학자 불레틴’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아마도 밀사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시걸은 또한 북한이 플루토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음.
- 시걸은 북한에 파견될 밀사의 역할과 관련, “북한이 플루토늄 시설을 불능화하고 핵연료봉을 폐기하는 대가로 에너지 지원을 해준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는 것은 물론, 북한이 핵검증을 위한 서면합의를 수용한다면 추가적인 에너지 지원을 약속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또 밀사는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 및 이들 무기에 대한 폐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 남북한, 중국이 참여하는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착수한다는 제안을 해야 한다고 시걸은 제안했음.
- 특히 미국은 이 선언에서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음을 재확인



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됐을 때 한국전을 종식하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겠다는 점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시걸은 강조했다.

- 시걸은 미국은 밀사의 활동결과를 토대로 한국, 일본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북한과 주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걸은 ▲북한의 핵시설 폐기, 중·장거리 미사일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농업, 에너지, 인프라 지원 등 경제적 개입을 심화하고 ▲북한이 연료제조 공장, 재처리 시설, 영변 원자로를 폐기할 경우 외교관계 수립에 들어가며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를 이행하면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약속을 하게 될 역대 안보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이와 함께 북한의 핵프로그램 폐기시 재래식 발전소를 건설해 주고, 북한의 플루토늄 폐기시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음.
- 시걸은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로드맵에 대한 합의를 매듭짓고, 6자회담의 추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걸은 내달초 오바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지게 될 북미간 첫 민간교류 차원의 방북에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 유엔 “北 세쌍둥이 부모와 분리양육 우려”(2/1)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북한 어린이들의 권리에 관한 대북 권고문에서 먹는 문제 등 경제사회적 권리에서 더 나아가 자유로이 책이나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등 포괄적인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해문제도 제기했음.
- 연합뉴스가 1일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을 통해 입수한 이 위원회의 3번째 대북 심의권고문은 제27,28항에서 북한 당국이 국가안보 논리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 아동들의 자유로운 모임이나 평화로운 집회를 막고 책이나 인터넷같이 정보를 입수하는 주요 수단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개선 조치를 권고했음.
- 권고문은 이어 아동들에 대한 종교자유 보장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의 아동권리 침해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고 시정 조치를 주문했음.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특히 제 34항에서 세쌍둥이가 국가에 의해 홍보 목적으로 자동적으로 부모로부터 떼어내져 양육되는 것을 포함해 북한의 탁아소 제도에 우려를 나타내고, 집체공연인 ‘아리랑’에 아이들을 동원, 공부할 시간을 빼앗는 문제를 시정할 것과 교과 과정에 평화교육을 포함시켜 평화와 관용의 문화를 학교에서 배양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음.
- 세쌍둥이 문제와 관련, 이영환 북한인권시민연합 팀장은 “북한에서 90년대 후반부터 선군사상 고취의 일환으로 세쌍둥이는 국운이 흥한다는 선전하에 부모 집에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평양에 따로 데려다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현실을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번 권고문은 북한 당국이 2007년 제출한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에 대한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북한은 이에 앞서 1998년 5월과 2004년 6월에도 심의를 받았었음. 이번 심의는 지난 23일 제네바에서 북한 당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남한 대북 인권단체들도 방청했음.
-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북한내에는 북한 당국의 아동인권보고서를 반박할 자유로운 인권시민 단체가 없는 점을 감안, 대신 반박하는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현지에서 심의위원들에게 북한 아동의 인권실태를 적극 설명했다.
- 다음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북한 아동권리에 대한 3번째 권고문의 주요 내용.
  - ▲북한 시민단체가 관변단체와 구별이 안되는 점을 바로잡기 위해 자발적 시민사회를 조성할 것.
  - ▲부모의 출신성분에 따른 아동 차별을 없앨 것.
  - ▲상당수 아동이 실재론 고아가 아닌데도 고아원같은 아동보호기관에 수용돼 있는 현실을 시정할 것.
  - ▲산간벽지 등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의약품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게 할 것.
  - ▲유엔 기관들이 지원하는 식량 등 인도적 물자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할 것.
  - ▲16세 전후 소년병 징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장자순으로 징병할 것.
  - ▲아편농장 노동에 아동이 동원되고 약물 남용이 증가하는 데 대한 우려 표명.

### ● 불턴 “북핵 무시는 위험한 도박”(2/1)

- 북한이 남북 합의 파기 선언 등 대남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가 밀려나는 것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존 불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3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북한을 무시하는 것은 “매우 큰 돈이 걸린 위험한 도박”이라면서 지금은 북한을 무시할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음.
- 그는 최근 북한이 남북합의 파기 선언 등 강경 제스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지원을 요구하는 절박한 외침’이라거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설 이후 주의를 끌려는 조치 등으로 평가절하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이런 북핵문제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논리에 사로잡힌 초기 징후가 있다고 경고했음.
- 불턴은 인준 청문회에서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한의 농축 우라늄 제조 프로그램에 대해 확실히 검증된 바 없다고 발언한 점을 지적하면서 클린턴이 이를 인정하기를 꺼리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말했음.
- 그는 또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으므로 이란과 달리 시급하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설정하면서 북한 정권을 압박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똑같이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음.

- 그는 조지 미첼 중동 특사가 임명 5일 만에 현지에 도착해 이란 핵 문제에 관한 연쇄회동을 시작하고 리처드 홀브룩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사도 내주 현지를 방문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나 아직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특사는 없다는 점을 지적했음.
- 볼턴은 북한이 급박한 위협이 아니라는 믿음은 북한이 단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만 위협이 된다는 ‘착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시리아 등으로 핵기술을 전파하려는 북한의 움직임 때문에 북핵 프로그램은 이미 중동 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따라서 북한과 중동 문제가 연관성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면 평양은 물론 이란의 핵개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 美상원군사위원장 “새행정부, 북미대화 재개할 것”(1/31)

- 칼 레빈(민주·미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북한과 양자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는 한국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했음.
- 레빈 위원장은 이날 군사위원회 이번 회기 주요 의정과제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는 군사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다룰 중요한 사안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음.
- 그는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에 “커다란 도전”이며 이에 따른 안보위협은 미국과 한국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가가 함께 힘을 모을 때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음.
- 이어 그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이 북한과 양자회담을 속개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과거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부르며 북미 양자회담을 중단했던 것은 북한의 핵위협 제거를 위해 “비생산적”이었다고 지적하고 “내 생각으로 새 행정부가 앞으로 북미 양자간 대화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음.
- 그는 그러나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북미 양자회담을 지지해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들 나라의 지지없이는” 미국이 북한과 양자회담에 나서선 안된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보도했음.

#### ● “금융위기에 北 채권가 사상 최저”<RFA>(1/31)

-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북한 채권 가격이 하락을 거듭해 현재 거래가는 액면가의 10분의 1도 안되는 1달러당 8센트로 1994년 발행 이래 최저가를 기록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보도했음.
- 북한에 돈을 빌려준 서방은행들이 그 일부라도 찾으려고 발행한 북한



채권의 현재 거래가는 3개월 전 12센트에 비해 30% 넘게 떨어진 것으로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북한 채권은 1년 전만 해도 달러당 32센트였음.

- 방송은 북한이 서방은행에 갚아야 할 빚을 총 16억 달러로 추정하고 현재 북한 채권은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 때 10센트대로 떨어진 이후 최저가라고 말했다.
- 북한 채권의 거래를 대행하는 영국 금융 중개회사인 이그조틱스사의 스튜어트 컬버하우스 수석경제분석가는 “전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확보를 위해 투자자마다 안전한 현금을 선호하고 채권과 같은 상품에 투자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북한 채권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북한 채권 가격이 북한의 변화나 행위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금융위기에 따른 전 세계적 추세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상승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음.

#### ● “北 대남공세 도움 안돼” <미국무부>(1/31)

- 미 국무부는 30일 북한이 정치, 군사적 남북합의를 일방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북한의 대남공세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음.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남북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이러한 수사적 공세는 분명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우리의 계속적인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가로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드 부대변인은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지난 29일 남북합의 무효화 선언에 대해 “북한 측의 의도가 무엇인지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북한이 전에도 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봤고 앞으로 평양에서 적대적 수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 공세 가능성을 시사했음. 우드 부대변인은 또 이번 북한의 성명 발표 이후 특이한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 하지만, 그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처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무장관은 이 지역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서 북한도 국제사회가 6자회담에서 요구하는 것이 검증의정서임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 우드 부대변인은 또 “북한은 우리의 우선적 현안중 하나”라면서 “우리는 6자회담이 유용성이 있다고 여전히 믿고 비핵화 목표에 전념하면서 이 지역의 우방과 협력해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한의 이번 상황과 관련, 지역담당 관계자들과 반드시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현재 대북 정책의 다양한 측면을 여전히 살펴보고 있어 재검토 작업이 끝나야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음.

- 우드 부대변인은 대북특사 임명 문제에 대해 “대북 특사를 지명할지에 관한 문제는 대북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며 “계속 지켜봐 달라”고 주문했음.

### ● “北김정일, 정치적 입지 회복한 듯” <美관리>(1/30)

-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66)이 최근의 건강위기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제자리를 잡고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 같다고 미국 관리가 밝힌 것으로 로이터통신이 29일 보도했음.
- 로이터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안보담당 관리는 “김 위원장이 북한 당국내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등 지금은 권력의 핵심에 앉아 있는 것 같다”면서 “그는 몇 달 전 건강문제로 고생을 겪었지만 최소한 지금으로선 그런 문제들이 김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에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음.
- 앞서 지난 9월 김 위원장이 뇌졸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건강상태 및 북한체제의 안정성과 권력승계문제 등이 관심을 모아왔음.
-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김 위원장의 권력승계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유고될 경우 북한 장래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김 위원장은 지난 주 북한을 방문한 중국 고위 인사를 면담했으며, 이 장면이 TV를 통해 보도되고 중국측 인사가 면담결과를 전하면서 그의 건재가 확인됐음.

### ● 美 거물급 北전문가들 내주초 방북(1/30)

- 미국의 거물급 북한 전문가들이 내달 3일 평양을 방문해, 북측 고위급 인사들을 만날 계획인 것으로 30일 확인됐음.
- 미국 버락 오바마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간 첫 민간교류가 될 이번 방북에는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대사, 모튼 아브라모위츠 전 국무부 차관보, 리언 시걸 동북아 안보협력 프로그램 국장 등 6-7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특히 보즈워스 전 대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특사로 비중있게 고려하고 있는 인물이고, 리언 시걸 역시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여서 이들의 방북이 단순한 민간 교류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정통한 한 인사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스워스 전 대사 등 6-7명의 방문단이 오는 3일 평양을 방문해, 북측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 북측 고위급 인사들을 접촉한 뒤 7일께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말했음.
- 그는 이날 북한 중앙통신이 남한 정부를 비난하면서 남한과의 군사·정치적 합의를 모두 무효화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남북관계가 초긴장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들의 방북이 추진될지 여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북한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별개로 하고 있어 이들의 방북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방문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한 인사는 방북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며 확인을 거부하면서도 “방북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해 방북이 추진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 이 관계자는 “북한과 관계된 일은 실제로 이뤄지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 “북한 방문이 성사돼 다녀오고 나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실명을 사용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다.
-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현재로서는 지난번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전 평양을 방문했던 셸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센터(CIP) 아시아프 프로그램 국장과 비슷한, 북·미간 민간교류 확대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방북 인사들의 비중으로 봤을 때 양측이 현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모종의 논의를 진전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보즈위스 대사 등 방문단은 평양을 다녀온 뒤 미 국무부 및 백악관측 관계자들과 논의 결과를 공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 구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 앞서 지난 12일부터 5일간 방북했던 해리슨 국장은 북한 관리들에게서 이미 30.8kg의 플루토늄을 무기화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는 4개에서 5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으로 이해된다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미 조지아대 부설 국제문제 연구소 소장인 박한식 교수는 내달 말께, 북측 인사들을 초청해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또는 남북간 현안 해결을 위한 학술 포럼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 등 북·미간 민간 접촉이 활기를 띠 조짐.
- 조지아주 애선스 시에서 개최되는 이 포럼에는 미국 측 전문가들은 물론, 한국 측에서도 운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 2-3명, 북측에서는 리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등 2-3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 ● “오바마정부, 北인권상황 우려”<국무부>(1/30)

- 새로 출범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29일 공식 밝혔다. 국무부는 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책도 전체 대북정책 리뷰의 일환으로 재검토되고 있다고 확인, 대북정책 재검토가 마무리돼야 대북인권정책도 가시화될 것임을 내비쳤다.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대변인 직무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 인권상황은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상당한 우려사항(something of concern)”이라고 말했다.

- 우드 직무대행은 또 “분명한 것은 북한인권문제는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진전시킬까라는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의 일부분”이라고 언급, 북한인권 대응책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오바마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주요관심사로 다룰 것임을 시사했음.
- 그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분명한 것은 이 정부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통로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 “UNDP 북한사업 투명성 제고해야” <WSJ>(1/30)

- 유엔개발계획(UNDP)의 북한 사업 재개가 빠르면 3월께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의 유력 보수언론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실을 통해 이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음.
- 지난 2007년 초 UNDP 북한 사업의 자금 전용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이 신문은 수전 라이스 유엔대사가 금주중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신임장을 제출하는 것을 계기로 “라이스 대사가 그녀가 공언했던 유엔의 효율성과 지속적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UNDP 북한 사업문제에 대해 브리핑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문은 2년전 북한 사업의 자금 전용 의혹이 제기된 뒤 미 의회 조사를 통해 북한 관리들이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던 질척한 인사관행 문제가 밝혀졌으며, 취약한 기금 감시, 일부 기금이 북한 정부의 주머니속으로 들어간 점, 불법 송금 등의 사례가 드러나 UNDP 집행이사회가 사업을 중단시켰던 점을 상기시켰음. 다만, 집행이사회가 최근 북한 사업 재개를 결정하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할 단서 조항들을 붙인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 가령, 지난 2007년 중단됐던 7개 사업은 재개하지만, 추가 사업은 UNDP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나, 프로젝트 과정에 대한 제한없는 접근권을 보장받은 점, 또 현지 직원 채용에서 과거 북한 정부의 일방적 추천에 의했던 방식을 개선해 UNDP가 선발에 관여할 수 있게 된 점,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정부가 현금을 직접 만질 수 없도록 한 것 등임. 그러나 WSJ는 UNDP의 내부 회계 감사 기능은 반드시 개혁돼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 믿을 수 없지만, 최근까지 내부 회계감사가 ‘최고 기밀’로 간주돼 회원국들에게도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기금을 낸 회원국들은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전혀 알 수 없도록 돼 있었다는 것임. 특히 북한 사업의 경우 유엔과 미 의회 조사 결과, “김정일을 제외한 누구도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알 수 없도록” 돼 있었다고 신문



은 주장했음.

- WSJ는 이 같은 상황이 이제 개선돼 UNDP가 이사회 멤버들에게 ‘요청 즉시’ 내부 회계를 공개토록 한 것은 다행스러운 것이라면서, 리스 신임 대사에게 자신의 개혁 약속을 지키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재차 주문했음.

#### ● “北동창리 미사일기지 완성단계” <美전문가>(1/29)

-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건설중인 미사일기지가 완성단계로, 올 봄에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한 전문가가 주장했음.
- 민간단체인 국제위기감시기구(ICG) 서울사무소의 대니얼 핑크스톤 수석연구원은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위성사진과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이 북서쪽에 짓고 있는 최신 미사일기지는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음.
- 핑크스톤 연구원은 이어 “북한은 이 시험장에서 이르면 이번 봄에 대포동2호 미사일 시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음. 북한은 2006년 7월5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대포동2호 미사일(사정 4천300~6천km)을 처음으로 발사했지만 40초간 정상비행하다 공중에서 부러져 실패한 바 있음.
- 한국과 미국의 정보당국은 북한이 8~9년 전부터 동창리에 무수단리 기지보다 규모가 큰 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건설해 온 것으로 보고 있음.
- 핑크스톤 연구원은 북한이 동창리에 미사일 기지를 마련한 것은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며 “동창리에서 발사된 미사일도 일본 위를 지나갈 수는 있지만 북한은 일본 영공보다 높이 지나갔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이 미국 오바마 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핵실험 준비차원의 고풍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음. 핑크스톤 연구원은 “북한은 2008년 하반기까지도 플루토늄은 사용하지 않는 고풍실험을 계속했다”면서 “평양은 정치적 효과가 최고조에 이를 시점을 택해 고풍실험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음.

#### ● 오바마, 北, 이란에 ‘당근과 채찍’ <WSJ>(1/29)

-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파키스탄 등에게 ‘당근과 채찍’ 접근법을 시도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음.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미국의 일부 적대국에게 회유적 발언을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음.
- 신문에 따르면 오바마와 클린턴은 이란과 보다 외교적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고, 클린턴은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가 오래도록 꺼려온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선호할 수도 있음



을 내비쳤음.

- 클린턴은 27일 간담회에서 “북한과의 6자회담은 필수적”이라면서 “6자회담 내에 (북·미) 양자회담이 있었고, 우리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양자회담을 적극 활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27일 아랍에미리트(UAE)의 위성채널인 알-아라비아와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은 무슬림의 적이 아니다”며 이란과 대화를 하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이란과 열린 대화를 추구할 것임을 밝혔음.
-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파키스탄의 무장세력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고,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주도한 스텐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오바마 정부에서도 다시 기용될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대이란 금융압박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신문은 이런 움직임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 파키스탄의 지도자들에게 선택을 할 것을 제안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음.
- 즉 미국의 외교적 접근에 긍정적으로 응하고 미국의 지원을 수용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보답을 하던가, 아니면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고 제재와 군사력에 직면하던가를 택하라는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 ● “北, 오바마에게도 골칫거리 될 것”(1/28)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새 미국 정부가 경기침체 극복을 비롯한 여러가지 현안을 안고 있고 미 국무부 안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비확산에 더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도 있지만,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에도 여전히 짜증나는 골칫거리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보도했음.
- 뉴스위크는 27일자 인터넷판에서 정권 이양 과정에 참여한 한 전직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국무부의 상당수는 북한 문제를 당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대신 북한 핵무기의 확산을 예방하거나 막는 방법이 당면 과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 그러나 뉴스위크는 북한이 한국에 “전면적 대결 태세”를 선언한 것부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접견하는 장면을 공개하기까지 이르는 여러 사건들이 모두 주의를 끌려는 북측의 시도라고 평했음. 북한 지도부는 오바마 정부에 여전히 북한 문제와 관련된 협상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갖고 있으며 북핵 문제의 비중이 경제나 아프간 문제에 비해 뒤지지 않음을 보여주려 한다는게 뉴스위크의 분석.
-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한다”며 “오바마 정부가 문제거리로 받아들여게끔 자신들을 부각시키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 케네스 퀴노네스 전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이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협상에 나서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에) 상응하는 내용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적재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 뉴스위크는 북한의 ‘구매 희망 목록’에 모든 대북 경제제재의 해제를 비롯해 한국에서의 완전한 미군 철수, 미국이 부인하는 한국내 미군 핵무기 존재의 완전한 부재 확인, 미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 등이 있으며 경수로 2기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음.
- 북한 관리들이 셸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센터(CIP)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에게 보유하고 있는 모든 플루토늄이 무기화됐다고 밝힌 이유에 대해서도 뉴스위크는 플루토늄이 더 이상 국제사회의 감시 대상, 즉 핵협상 대상이 아님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리티지재단의 클링너 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실천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가속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 역시 전임지들과 같은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했음.

#### ● 유니세프, 대북지원 1300만달러 목표(1/28)

-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는 올해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사회로부터 1천300만 달러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28일 유니세프가 발표한 ‘2009 인도주의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문별 소요자금은 보건·영양 분야 750만 달러, 수질과 공중위생 분야 450만 달러, 교육 분야 100만 달러 등임.
- 유니세프는 “2007년 홍수 피해의 여파와 전통적으로 상당한 양의 식량 부족을 메워왔던 (한국과 중국 등으로부터의) 식량 수입이 급감하면서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의 영양부족 상태가 심각한 우려 사안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유니세프는 북한에서 계속되는 가난과 미흡한 보건위생 체계, 불량한 수질 및 위생 시설, 아동·임산부에 대한 부적절한 보호 조치, 취약한 식량 상황 등으로 인해 아동사망률이 1천명당 55명, 5세미만 아동과 임산부가운데 각각 37%와 32%가 영양부족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음.

#### ● 문타폰 보고관 “北 인권상황 더 악화”(1/28)

- 북한의 인권상황 조사를 담당하는 비릿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은 27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에서는 사람의 권리와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共同)통신 등이 보도했음. 그는 “지난해에도 공개 처형이 이뤄졌다”면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유엔 전 시스템을 동원한 압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은 아직도 나의 방북을 거부하고 있으며 형무소에서의 고문



- 과 여성에 대한 폭력, 인권 침해가 우려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아울러 그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몇 년 전부터 특정 연령 이하의 여성이 시장에서 물건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주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으며 특히 지난해 말 들어서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와병이 이런 단속 강화의 원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 중국 선양(瀋陽)에서 열린 북일간 협상에서 납치피해자 재조사에 합의하고도 북한이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고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3일 일본을 방문, 납치 피해자 가족 및 일본 내 탈북자들과 면회하는 한편 요코타 메구미씨 등이 납치됐던 니가타(新潟)현도 방문했다.

#### ● “美, 고위급 대북특사 물색”<RFA>(1/28)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북한 특사로 국제적 신망이 있는 중량급 인사를 물색중인 가운데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와 스티븐 보스워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새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했다.
- 이 문제에 밝은 한 전직 국무부 고위관리는 리처드슨 주지사가 북한을 여러번 다녀오는 등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은 점을 지적, “그가(정치자금 문제관련) 개인적 문제를 잘 해결하면 오바마 행정부가(그에게) 특사직을 제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고 RFA는 전했다. 리처드슨 주지사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상무장관에 내정됐다가 특정 기업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 4일 자진 사퇴했다.
- 이 전직 고위관리는 그동안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 조정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고위 인사” 등 3명이 특사직을 제의받았지만 “특사직은 출장도 많고 협상이 긴 데다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하며 일본과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논란이 많고 협상 타결도 쉽지 않은 힘든 자리”여서 모두 고사했다고 말했다.

#### ● 美국무 테러담당차관보에 벤저민<WP>(1/26)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테러담당 차관보에 대니얼 벤저민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을 내정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 보도했다. 벤저민 내정자는 ‘다음번 공격(The Next Attack)’이라는 테러관련 저서를 공동출간한 테러전문가로, 대선 때 클린턴 장관에게 테러관련 자문을 했었다.
- 클린턴 장관은 또 검증·이행담당 차관보에 로즈 가테모엘러 카네기 재단 러시아담당 연구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이행담당 차관보는 북미간에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내역에 대한 검증합의가 이뤄져 실제 검증이 이뤄질 경우 이를 총괄지휘하게 될 것으로 알려져



향후 활동이 주목됨. 이어 클린턴 장관은 국무부 정보조사국 국장에 제니퍼 심스 조지타운대 교수를 내정했다고 포스트는 전했다.

#### 다. 중·북 관계

##### ● 中외교, 北엔 정상회담...南엔 정협강화(1/29)

- 중국은 올해 한반도 안정을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내실있는 외교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베이징의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북-중 수교 6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상호 방문을 추진 중.
- 후 주석은 지난주 춘제(春節·설)를 앞두고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한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통해 전달한 구두친서에서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초청했고, 김 위원장은 이를 수락한 상태.
- 아직 변수가 많이 남아있지만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다면 후 주석의 답방이 있을 것으로 보여 북한과 중국은 올해 정상회담을 통해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관측하고 있음.
- 반면 한-중간에는 작년 이명박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과 3차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2차례 등 모두 5차례의 정상회담을 한 것과 달리 올해에는 정상회담은 1차례 정도에 그치고 내실있는 외교가 펼쳐질 전망이다.
- 한-중 외교의 무게중심은 국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 모색과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다각적으로 심화시키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두어질 것이라고 주중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 중국은 이같은 내실 외교를 중심으로 하되 차기 대권을 이어받을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을 한국에 보내 한국 지도층과 상견례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 ● 김정남 마카오행..中 후계선호 부인(1/28)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38)이 27일 오후 중국 베이징을 출발해 마카오로 떠나면서 “중국이 자신을 후계자로 선호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는 이어 뇌졸중을 앓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김정일의 건강 상태에 대해 “양호하다”고 밝혔다.
- 김정남은 이날 오후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마카오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차기 지도자로 당신을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질문에 “그건 사실이 아니며



잘못된 정보”라고 부인했다고 일본의 NTV 등이 보도했음. 김정남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아버지의 지위는 누가 이어받게 될 것이냐”고 묻자 “아무도 알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음.

- 그는 북한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면서 후계 구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집단지도체제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민감한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며 입을 닫았음.
- 김정남은 이날 저녁 늦게 마카오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아버지인 김정일을 봤을 때 “매우 좋아 보였다”라고 말했다고 일본 아사히 뉴스가 보도했음.

## 라. 일·북 관계

### ● 日 언론, 북한 ‘무효화’ 선언 주시(1/30)

- 일본 언론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30일 오전 성명에서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는 내용을 주요 기사로 보도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음.
- 교도(共同)통신은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북한의 발표 내용을 상세히 전하면서 “북한이 한국과의 전면 대결 자세를 한층 강화했다”며 “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정권이 한국의 대북정책에 동조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 아울러 통신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교류에 핵문제나 인권문제를 연결시키는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을 내건 데 대해 반발해온 북한은 17일에도 인민군 총참모부 성명을 통해 한국과 전면대결 태세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 요미우리(讀賣)신문도 북한의 성명 발표에 대해 “이전 정권까지의 대북 융화정책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간 이명박 정권과의 대결자세를 한층 선명히 한 것으로 한국측에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려는 포석이 있다”고 분석했음. 이어 신문은 “이제 앞으로는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의 후속 조치에 나섬으로써 남북간 대립을 격화시킬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며 “그 경우 세계적인 경기 악화로 정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정부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아사히(朝日)신문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건강 불안으로 동요하는 북한 내부를 단속하고 미국의 오바마 정권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 NHK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폐기’하겠다는 내용과 관련, “서해에서의 군사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압력을 한층 강화한 것”이라며 “북한의 해군이 실제로





도발적인 행동에 나설지가 주목된다”고 지적했음.

마. 기타

● 북한, 태외무장관 평양방문 초청(1/29)

- 카시 피로미야 태국 외무장관은 29일 북한 정부로부터 평양 방문을 초대받았다고 밝혔음. 카시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오영선(59) 태국주재 북한 대사가 예방해 구두로 평양 방문을 제안했다고 말했음. 그는 이 자리에서 오 대사에게 1970년대 북한으로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태국 여성 아노차 판조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음.
- 아노차는 1978년 5월21일 마카오에서 친구들과 일을 하던 중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금까지 아노차의 납치를 부인해왔음.
- 카시 장관은 또 탈북자들의 태국 망명 문제와 관련, 탈북의 주요 통로인 중국과 사태해결 방안을 논의하라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 이상 탈북자들의 망명지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佛언론 “김정일 재출현은 對美 메시지”(1/27)

- 프랑스 주요 언론들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지난 23일 회동 사실을 관심있게 전하면서 북한의 권력공백에 관한 무성한 소문을 일축했다고 보도했음.
- 일간 르몽드는 “최근 몇 달 간 북한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의 통치능력에 대한 의문이 계속돼 왔으나 김 위원장의 재출현은 그가 여전히 북한을 통치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고 전했다.
- 신문은 언론에 공개된 두 사람의 회동 사진은 김 위원장이 외빈을 접견할 만큼 건강이 회복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러나 김 위원장의 살과 머리 솥이 조금 빠진 듯하고 왼 팔의 사용이 불편해 보였다는 북한 전문가들의 전언을 곁들여 소개했음.
- 신문은 이어 김 위원장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취임식 이틀 뒤 모습을 드러낸 것은 미국의 새 행정부에 대북 교섭 상대가 있다는 점을 알리려는 북한의 메시지라는 전문가들의 해석도 함께 전했다.
- 일간 르 피가로도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직후 북한 방송이 지도자의 회견사진을 15장 가량 배포한 것은 의도된 신호라고 전하고 미국의 새 민주당 정권이 그동안 중국이 주요 역할을 해온 6자회담과 다른 접근을 모색하는지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음.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北붕괴시 안정위해 한·미병력 46만명 주둔해야”(1/28)

- 북한체제가 붕괴,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에 주둔할 경우 치안 및 안정 유지를 위해 현재 이라크 주둔 미군의 3배 규모인 최대 46만명의 병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음. 또 북한이 붕괴하면 탄도미사일과 함께 6~8개로 추정되는 핵무기 및 핵물질, 4천t의 화학무기 등의 안전확보가 미국의 최우선 과제가 되겠지만 중국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에 관심을 갖고 있어 이를 확보하려고 경쟁을 벌이면 심각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 다국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 미국의 민간 외교단체인 외교협회(CFR)는 27일 ‘북한의 갑작스런 변화 대비’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악화를 계기로 북한이 갑작스럽게 변화를 맞게 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는 우선 북한 김정일 후계구도와 관련, 후계자를 지정한 상태에서 지도부가 바뀌는 ‘관리된 권력승계’, 군부나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인물이나 집단이 경쟁을 벌여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경쟁적 권력승계’, 김정일 정권 이후 대다수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한 지도체제가 성립하지 못해 과거 동유럽처럼 무정부 상태 혼란에 빠지는 ‘권력승계 실패’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했음.
-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폴 스테이어 예방조치센터(CPA) 국장과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조엘 위트는 북한에서 관리된 권력승계가 이뤄지면 가장 문제가 적겠지만 경쟁적 권력승계나 권력승계 실패시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와 딜레마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는 북한에서 권력승계 암투가 장기화되거나 권력공백사태가 발생하는 등 급변사태시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비무장지대(DMZ) 및 서해상에서의 남북 무력충돌, 대규모 탈북사태, 식량난과 같은 북한 내부의 대규모 인도주의적 위기 발생, WMD 안전확보, 북한 내 치안과 안정유지문제 등을 꼽았음.
- 특히 보고서는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 내 치안과 안정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일반적으로 인구 1천명당 5~10명의 병력이 요구된다며 북한의 인구가 2천300만명인 만큼 11만5천~23만명의 군병력을 한국과 미국 등이 충원해야 한다고 분석했음. 보고서는 여기에다가 수만명의 경찰병력이 기본임무를 통해 군병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한국은 향후 10년간 육군 병력을 30%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병력 소요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 북한군이나 치안 및 정보기관 출신자, 10만명에 달하는 특수군 출신자들이 미군을 비롯한 외국군 주둔에 대해 저항운동을 전개할 경우 치안 및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병력수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음.
- 미 국방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저항운동 발생시 1천명당 20명의 주둔병력이 필요한 만큼 북한에 최대 46만명의 치안 및 안정화 병력이 요구된다는 것. 이는 현재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의 3배를 훨씬 넘는 규모로, 한국과 미군만으로는 이런 급변사태에 대응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 이어 보고서는 북한 급변사태는 미국으로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함께 6~8개로 추정되는 핵무기 및 핵물질, 4천t에 이르는 화학무기와 북한이 보유한 생물무기를 찾아내 안전을 확보하고 처분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음.
- 하지만 WMD를 찾아내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선 수천명의 병력과 최첨단 탐지장비를 구비한 기술진들을 필요로 하는 데다가 영변처럼 기존에 존재가 드러난 시설 뿐만아니라 WMD 관련 의혹이 있는 모든 곳을 조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음.
- 보고서는 더욱이 중국을 비롯한 다른 주변국도 북한 WMD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이런 노력을 벌일 경우 중대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 정치적으로는 어렵지만 다각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 보고서는 이런 점을 토대로 미국 정부에게 북한에서 정권교체를 추구하기보다 북한 정권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게 유용하다며 이를 위해 북핵 6자회담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음. 또 보고서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일방적 행동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북한의 변화를 관리하는 주도권이 한국에 있음을 인정할 것과 중국을 비롯한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건의했음.
-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 보고서는 대북정보능력을 강화하고, 북한 측과 계속 접촉할 수 있는 창구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면서 특히 한국 전쟁 당시 숨진 미군 유해 발굴사업 재개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음.
- 또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오해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조용한 대화를 추진할 것을 아울러 조언했음.

#### 나. 한·중 관계

##### ● “北, 남북관계 최악대비 끝낸듯” <중신화>(2/1)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달 30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성명을 내고 남북 간 정치·군사 합의사항의 무효를 선언한 것



과 관련해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위기를 분석하는 장문의 기사를 1일 게재했음. 통신은 서울과 평양의 특파원발 기사에서 “최근 대남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강경정책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조평통 발표에 한국 정부는 냉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해 상의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비, 군사 대비 태세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 통신은 그러면서 조평통의 발표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한국 정부가 취한 대북정책이 이른바 ‘부끄러운 실패’를 했다는 상황을 이끌어내려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는 북한이 남북 관계에서의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를 끝냈음을 의미한다”는 해석을 곁들였음. 통신은 그러나 조평통의 성명이 수위가 높긴 하지만 남북 관계의 개선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닐 것으로 관측했음.
- 조평통의 성명에 북한이 중시하는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고성 메시지과 맥을 같이하며 남북 관계에 대한 개선의 여지도 담겨 있다고 분석했음. 통신은 특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최근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에게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반도 정세의 긴장상태를 원치 않는다”면서 “(6자회담) 각 당사국들과 평화적으로 함께 지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에 주목했음.

#### ● 中전문가 “中, 南北갈등 원치 않아”(1/30)

- 한반도 전문가인 선스순(沈世順)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30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발표한 성명과 관련, “남북간의 대결 국면과 갈등은 중국의 평화와 안정적인 발전에 매우 불리하다”면서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남북 관계의 발전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선 연구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인터뷰에서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면담한 지 일주일만에 발표된 이번 성명과 관련, “중국 역시 이같은 발표를 미리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중국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기는 해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해왔다”면서 “이번에도 중국과 의견 교환이나 귀뜸 없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같은 발표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성명에 대한 중국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최근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 총참모부가 남북 전면대결태세를 선언한 뒤인 20일 “남북이 대화를 통해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음.
- 장 대변인은 당시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의 이웃 국가로서 중국은 시종일관 남북 양측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는 한반도 전체 국민의 공동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동시에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선 연구원은 조평통의 이번 발표의 의도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정부를 동시에 압박하는 복합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음. 선 연구원은 “조평통의 발표는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강한 불만과 실망감을 잇따라 드러내 온 최근 발표의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이와 함께 오바마 정부에 북핵 문제의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음. 북한이 차기 6자회담을 비롯한 핵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사전 포석의 의도도 깔려 있다고 그는 분석했음.

#### ● “2010 한중일 정상회담 제주서”(1/29)

- 한태규 제주평화연구원장은 29일 “2010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장소는 제주가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음. 한 원장은 이날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 지정 4주년을 기념해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세계 평화의 섬 제주가 나아갈 길’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6월 제주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음.
- 그는 “동남아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제2위 해외 건설시장으로 3대 투자대상이며 5대 교역대상지역인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새 현장 채택으로 새롭게 출발해 통합의 길을 걷고 있는 아세안과의 특별정상회담이 제주에서 열리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말했음. 그는 이어 “제주에 이제 외교와 국제회의의 허브로 발전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심지로 각광받기 시작했다”면서 “이 곳에서 2010년 한중일 3국 정상회담까지 개최된다면 동아시아 정상회담의 중심지로 그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다. 한·일 관계

##### ● 韓총리 “김현희-다구치가족 만남 허용”(1/30)

- 한승수 국무총리는 30일 한국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의 범인인 김현희씨가 일본인 납북피해자 가족과 만나는 것을 허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음. 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한 총리는 일본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은 자유 국가”라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며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든 간에 만나기 위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음.
- 한 총리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 언제 김씨와 일본인 납북피해자이자 김씨의 일본어 교사인 다구치 야에코씨 가족의 만남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음.
-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김씨와 다구치 야에코씨 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일



당국은 현재 만남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 ● 한·일 6자 수석대표 오늘 회동(1/29)

- 한국과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사이키 아키다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8일 서울에서 오찬을 겸해 회동함. 사이키 국장이 서울에서 열리는 일본의 주한공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회에 회동하는 것으로, 양국 수석대표는 북핵상황 전반에 걸쳐 논의할 예정임.
- 양국 수석대표는 특히 미국 오바마 정부와의 공조체제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 협의하고 최근 황준국 북핵기획단장의 방북 결과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키 국장은 오찬 회동 이후 청와대 관계자 및 조태영 외교부 동북아국장과도 각각 회동, 한일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음.
- 특히 사이키 국장은 조 국장과의 회동에서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됐던 김현희씨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이자 자신의 일본어 교사였던 다구치 야에코씨 가족 간 만남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음. 나카소네 히로후미 일본 외상은 최근 김현희씨가 다구치씨 가족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자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 ● 한·일 “중·러와 북핵협의 강화”(1/29)

- 한국과 일본은 29일 북핵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의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음. 한국과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사이키 아키다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의 한 식당에서 오찬회동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전했다.
- 이는 검증의정서 채택 등에 있어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임. 양측은 또 미국측 북핵 담당자가 결정되는 대로 가급적 조속히 향후 6자회담의 추진방향 등에 대해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음.
- 양측은 아울러 황준국 북핵기획단장을 책임자로 한 미사용연료봉 실사단의 최근 방북결과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면담결과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음.
- 이번 회동은 사이키 국장이 서울에서 열리는 주한 일본공관장회의 참석차 방한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음.

#### ● 日고교 해설서 발표 늦춰..독도기술 관심(1/26)

- 독도기술이 담길지 여부가 관심인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당초 예상보다 늦은 올해 하반기에나 발표될 것으로 알



려졌음. 외교 소식통은 26일 “당초 올해 3~4월께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일본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발표가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현재로서는 3분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이 소식통은 “발표가 지연되는 배경을 다각도로 파악중”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한·일 정상 간에 서틀외교가 본궤도에 오르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한일관계를 고려해 일본 정부가 해설서 발표에 신중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라. 한·러 관계

### ● 한·러 수교 20주년 대규모 문화행사 개최(1/27)

-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한·러 수교 20주년을 맞아 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걸쳐 양국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문화부 관계자는 “러시아는 4강 외교뿐 아니라 에너지·자원외교가 중첩된 중요한 나라여서 수교 20주년을 맞아 문화교류를 통해 상호이해와 우호협력을 증진할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그 일환으로 내년 5월 양국에서 대규모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다채로운 교류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어 “수교 20주년 기념행사는 단순한 문화예술 교류행사를 넘어 관광분야에서 ‘상호 방문의 해’ 제정, 축구와 태권도 등 체육교류, 영화 공동제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추진된다”면서 “현지에서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올해와 내년에 모스크바에 있는 한국문화원을 집중 지원, 행사추진의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양국간 문화행사는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때 양국 정상이 수교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문화 및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내달 러시아를 방문해 양국간 문화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양국 문화행사 담당부서 국장급 협의체가 구성돼 프로그램 협의 및 상호지원 계획을 세워나가며, 내년 5월 개막행사 등을 총괄기획할 예술감독도 내달께 선임될 예정이라고 문화부 관계자는 전했다.
- 한편 문화부는 민간 부문에서 개최하는 제4회 한러교류축제와 연계해 올해 9월부터 콘서트 등 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 사전행사를 다양하게 마련함.

## 마. 미·중 관계

### ● 中 “오바마 정부의 對中정책 헛갈리네”(1/28)

- 중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새 정부의 중국 정책이 부시 전 대통령 정부 때와 달리 중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미국의 정책변화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베이징의 서방 외교소식통들이 28일 전했다.

- 소식통들에 따르면 베이징 당국은 오바마 대통령 정부의 주요 장관 간에 중국과 관련된 대외정책에 이견이 표출되고 자국 화폐인 ‘런민비(人民幣) 환율조작’ 여부에 대해서도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자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우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중국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표명했음.
- 클린턴 장관은 27일 장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중국과 포괄적인 대화를 하겠다고 밝혀 중국에 청신호를 보냈다. 클린턴 장관은 부시 전 행정부가 중국과 경제문제에 치우쳤던 것과 달리 미-중은 국제 금융위기극복을 비롯해 많은 문제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게이츠 장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은 중국의 어떤 군사적 위협에도 대처할 태세가 돼 있다고 미-중간의 대화보다는 대결적인 측면을 먼저 거론했음. 또 클린턴 장관은 중국이 주요 외교정책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북핵 6자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게이츠 장관은 6자 회담 성과에 불만을 드러냈음.
- 미국이 런민비와 달러간의 환율에 대해 어떤 정책을 취할지도 중국으로선 초미의 관심사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결정된 것 같지는 않아 보임.
-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2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중국에 환율정책 변화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백악관은 나흘 후인 26일 중국의 위안화 환율 조작 여부를 이번 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음.
- 중국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쑤닝(蘇寧) 부행장이 24일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진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일축했지만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음. 중국은 일단 임시 대응조치로 달러에 대한 런민화 환율을 평가절하 해놓고 미국의 정책 방향을 주시하고 있음.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7일 가이트너 장관의 ‘환율 조작’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음.
- 미 경제전문가 브레트 스완슨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당면한 금융위기는 달러화를 평가절하한 미국 화폐정책이 실패한 탓이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공격한 것은 과도한 반응이라고 지적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중국 언론들은 또 클린턴 장관이 기자회견 내용을 자세히 전하면서도 게이츠 장관이 발언은 다루지 않아 미국 신 행정부의 중국 정책이 자국에 호의적이기를 바라는 내심을 드러내 보였음.





## 바. 미·러 관계

### ● 美-러, 4월前 외무+국방장관 회의(1/31)

- 오는 4월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G20 제2차 금융 정상회의에 앞서 미국과 러시아가 ‘외무+국방장관 회의(2+2 회의)’를 개최, 민감한 안보 이슈를 논의할 것이라고 러시아 고위 관리가 말했다.
- 30일 러시아 뉴스통신사 이타르-타스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국방장관이 미국 국무장관, 국방장관과 런던 G20 정상회의 이전에 회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4월2일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날 예정.
- 라브코프 외무차관은 양국 ‘2+2 회의’의 개최 일시와 장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오바마 행정부 들어 국무장관을 맡은 힐러리 클린턴은 이 회의에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듀코프 국방장관을 첫 대면하게 될 전망이다.
-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유임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미 부시 행정부 시절 양국 ‘2+2 회의’에 참석한 바 있음.

### ● 러’ 美 MD 대응 미사일 배치계획 철회(1/28)

- 러시아가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 방어(MD)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령 칼리닌그라드에 미사일을 배치하려던 당초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28일 인테르팍스 통신이 러시아군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음. 이 관계자는 “새로 출범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MD 계획에 대해 이전 부시 행정부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미사일 배치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음.
- 미국은 이란과 북한 등 소위 ‘불량국가’의 잠재적 미사일 위협에 대비, MD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8월 폴란드, 체코 정부와 각각 단거리 미사일과 레이더 기지 건설을 내용으로 한 MD 계획에 합의했음. 그러나 러시아는 MD 계획이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반발해 왔음.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미 대선이 끝난 다음 날 MD 계획에 맞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 러시아령 칼리닌그라드에 이스칸데르 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음.
- 이스칸데르 단거리 미사일은 500km 사거리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며 칼리닌그라드에 배치되면 폴란드 전역은 물론 독일과 체코 일부 지역도 사정권에 포함됨. 이후 러시아는 미국이 MD를 철회하면 미사일 배치 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제로옵션’을 제안했지만, 당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음.
- 러시아가 미국의 MD 철회에 앞서 먼저 미사일 배치 계획을 중지하



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부는 양국 간 해빙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임.

-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지난 25일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 주변에서 ‘MD 계획을 서두를 필요가 없고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환영하며 오바마 행정부 아래서 미국과의 미래 관계를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라고 밝혔다.

### ● 푸틴 “美-러’관계 조심스레 낙관”(1/26)

- 러시아 최고 실력자인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출범과 관련, 미래 양국 관계에 대해 낙관론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음. 푸틴 총리는 25일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조지 부시 전 행정부가 추구한 외교 정책의 부정적 결과를 나열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동유럽 미사일방어(MD)계획,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등을 재고할 수도 있다는 신호들을 보내오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 아래서 미국과의 미래 관계를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라고 밝혔다.
- 그는 “오바마 대통령 주변에서 MD 계획을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우리는 그런 발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MD 계획의 실효성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음.
- 부시 전 행정부는 이란과 북한 등 소위 ‘불량국가’의 잠재적 미사일 위협에 맞서 MD 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러시아는 이 계획이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 지난해 말 폴란드 인근 러시아령 칼리닌그라드에 단거리 요격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음.
- 푸틴 총리는 또 “‘오바마 팀’이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의 나토 가입만이 이들 국가의 안보를 확보하는 길은 아니라는 견해를 보이는 것도 반가운 신호”라면서 “우리는 국제 안보에 최선의 방안을 찾는 일이라면 어떤 논의도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는 지난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속에 나토 가입 전단계인 회원국행동계획(MAP) 승인을 추진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러시아와 러시아의 눈치를 본 일부 서방 국가들의 반대로 무산됐음.
- 이와 함께 푸틴 총리는 최근 우크라이나와의 가스 분쟁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요즘 일어나는 일들은 과거 부시 행정부와 유럽 연합(EU)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 “美, 러에 잔소리 그만해야”<美연구원>(1/26)

- 이제 막 뜻을 올린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러시아와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러시아에 대한 ‘잔소리’는 그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음. 미 워싱턴 소재 두뇌집단인 우드로윌슨 국제센터의 알렉산드라 바크루 선임연구원은 26일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음.

- 바크루 연구원은 “러시아는 다루기 어려운 나라지만 미국이 어떻게든 감당해야 할 나라”라며 “오바마 행정부는 곤경에 처한 양국 관계를 구할 기회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바크루 연구원은 이어 “이 시점에 미국은 러시아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러시아의 민주주의가 어떻다는 등의 잔소리를 줄이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원칙에 입각한 실용주의”라고 강조했다.
- 바크루 연구원은 “상황이 악화될 때까지 내버려두기보다는 공유의 길을 찾아야 한다.”라면서 “공통 관심사랄 수 있는 무기 감축, 우주, 보건 분야 등에서 우선 협력하면 이후 양측이 고민하는 분야에서도 해결의 길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음.
- 특히 그는 현 러시아의 금융위기 상황을 ‘러시아 꿈이 상처를 입었다’라고 표현하면서 “겉으로는 자신의 영역에서 가장 힘이 센 아이처럼 행세하지만, 약자를 못살게 구는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마련이고 러시아도 예외는 아니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회적 불만이 커져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음. 그는 “러시아 정부가 최근 국가 반역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 바크루 연구원은 “부상당한 동물은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며 “러시아가 다른 나라를 못살게 구는 듯한 태도에 인상을 쓸지 모르지만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대우를 받아야겠다’라는 미국의 믿음 또한 러시아 처지에서 보면 무례하고 공격적”이라고 지적했음. 그는 “양국이 겸손한 자세로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협력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사. 미·일 관계

##### ● 日, 美와 4월 전 정상회담 개최 추진(1/30)

- 일본 정부는 오는 4월 이전에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고다마 가즈오(兒玉和夫) 일본 외무성 대변인이 30일 밝혔다.
- 고다마 대변인은 이날 “일-미 양국은 4월 2일로 예정된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 이전 시기 중 적절한 날짜가 언제일지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정상회담 장소는 미국이 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음.
- 미-일 정상 모두 G20 회담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일본 정부는 이보다 앞서 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8일(미국 현지시간)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빠른 시일 내에 아소 총리를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아. 기타

##### ● 외교차관, 내달 1~8일 유럽3국 순방(1/29)

-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다음 달 1~8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세르비아 등 3개국을 방문한다고 외교통상부가 29일 밝혔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 차관은 네덜란드와 세르비아 방문기간 각국 외무차관을 면담해 제반 양자 현안 및 한-유럽연합(EU)간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양국 관계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특히 신 차관의 세르비아 방문은 1989년 한국과 세르비아 수교 이래 우리 외교차관으로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올해 한-세르비아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문 대변인은 전했다.
- 신 차관은 또 다음 달 5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과 관련한 장관급 회의에 한국측 수석대표로 참석, 안보리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한편 회의에 참가하는 주요 국가들과 양자 면담도 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참고 1] <이명박 정부 출범후 남북관계 일지> (연합뉴스, 1/30)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지난 17일 대남 “전면대결태세 진입”을 선언한 데 이어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30일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의 무효화와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나서 한반도 긴장의 파고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이날 성명에서 특히 1991년 채택된 남북 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언급된 서해해상경계선에 관한 조항의 폐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이 “불과 불, 철과 철이 맞부딪치게 될 전쟁접경으로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남 대응을 중심으로 한 남북관계 일지.

- ▲ 2008.1.1 = 북한 신년 공동사설 “10.4선언 철저 관철” 강조
- ▲ 2.25 = 이명박 대통령 취임
- ▲ 3. 6 =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남한의 대북 인권개선 촉구에 “망동”이라고 비난
- ▲ 3. 24 = 북,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핵-개성공단 연계 발언에 개성공단서 남측 당국 인원 전원철수 요구
- ▲ 3.28 = 북, 서해상에서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 3차례 발사. 북 해군사령부 대변인, 서해 NLL 수역서 남북 충돌 경고
- ▲ 4. 1 = 북 노동신문 논평원,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처음 거론해 “역도”라고 비난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본격 비난 개시
- ▲ 4. 3 =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전화통지문 통해 ‘긴장 조성 행위 중단’을 촉구한 남측의 전통문 수용을 거부하고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  
북 해군사령부 보도, 남측 해군이 북한 영해를 침입했다며 “예상 외의 대응조치가 따르게 될 것” 주장
- ▲ 5. 8 = 조선중앙통신 군사논평원 글,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 충돌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다시 제3의 서해교전, 제2의 6.25전쟁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 ▲ 5.30 = 북, 서해상에서 함대함 단거리 미사일 3발 발사
- ▲ 6.22 =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변인 담화, 남측 정부가 ‘3통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에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
- ▲ 7. 8 = 북 조평통 대변인 담화, 이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발언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라”고 촉구
- ▲ 7.11 = 금강산 관광객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 남한 정부, 남한 조사단의 현장조사를 요구하고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



- ▲ 7.12 = 북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 금강산 사건에 “유감”이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며 현장 조사 거부
- ▲ 8. 3 = 금강산 지역 북한 군부대 대변인 특별담화, “금강산 관광지구 에 체류하는 불필요한 남측 인원 모두 추방” 발표
- ▲ 8. 9 = 동해지구 북남관리구역 군사실무 북측 책임자 통지문, “금강산 관광지구 체류하는 불필요한 남측 인원 추방 조치 8월 10일부터 실시” 발표
- ▲ 9. 3 = 북 조평통 대변인 담화, 여간첩 원정화 사건에 대해 “모략극” 주장
- ▲ 9.23 = 정부 소식통 “북한, 최근 서해상과 중국 접경지역서 대규모 비행훈련 실시”
- ▲10. 2 =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대표단,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개성공단 사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살포 중단 요구
- ▲10. 7 = 북, 서해 상공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 ▲10. 9 = 북 해군사령부 대변인 담화, 남측 해군이 북한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해상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일발의 사태 조성”이라고 주장
- ▲10.16 = 북 노동신문 논평원 글, 이명박 정부의 “반북 대결정책” 지속 시 “북남관계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
- ▲10.28 = 남북 군사회담 북측 대표 “빠라살포 등에 군 실천행동” 경고
- ▲11. 6 =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실장인 김영철 중장 등 군부 조사단 6명, 개성공단 현황 점검
- ▲11.12 =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 “12월 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한다고 전화 통지. 북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부 폐쇄, 북한측 대표 철수, 판문점을 경유한 남북 직통전화 단절 발표
- ▲11.22 = 북 조평통 대변인 담화, 이명박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라는 발언에 대해 남한 정부와 “북남관계, 통일문제를 논할 여지 없다”고 반발
- ▲11.24 =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 12월 1일자로 개성관광 전면 차단 및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구의 남한 당국관련 상주인원 및 차량에 대한 선별 추방 통보
- ▲11.25 = 북 노동신문, 남한 정부의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도발 책동” 비난
- ▲11.27 = 북, 12월 1일부터 경의선 및 동해선 출입경 시간대 대폭 축소 등 통보
- ▲11.28 = 개성관광 및 경의선 철도운행 마지막 실시 후 잠정 중단
- ▲12. 1 = 북측 군사분계선 육상통행에 대한 엄격 제한·차단조치 실시
- ▲12.17 = 북 국방위 정책실장인 김영철 중장, 개성공단을 방문해 “12.1



조치는 일시적이거나 잠정적이거나 상징적인 조치가 아니다”  
며 “현재 남북관계가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주장

- ▲12.24 = 북 조평통 산하 조국통일연구원, ‘고발장’을 발표해 “남조선 당국이 지금처럼 나가다가는 이제 어떤 극단적 사태가 또 터질지 알 수 없다”고 주장
- ▲2009.1.1 = 북, 신년 공동사설에서 이명박 정부를 “북남대결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 집권 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 6.15 및 10.4 선언의 이행을 강조
- ▲ 1.17 = 북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이명박 대통령을 거론하며 “혁명적 무장력은 그것을 짓부수기 위한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발표
- ▲ 1.30 = 북 조평통 성명,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하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서해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발표

sungjin@yna.co.kr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1/30/0511000000AKR20090130072400014.HTML>

 국제관계연구실 제공